

온라인, 방송, 통신은 2023년 1월 24일(화) 12:00부터 보도 가능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1. 25.(수) 조간	배포 일시	2023. 1. 20.(금) 15:00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수영 (02-2100-2650)
	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심원태 (02-2100-2656)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공정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02-2100-2691)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 30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등 -

[주요 내용]

◆ '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①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② 결제 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여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증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17년 도입 후 개설사례 없음)

③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④ 영문공시도 '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시장에 필요한 중요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 국제기준에 맞춰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추진 배경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와 장외거래의 제한은 '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장외거래를 제한하였습니다.
 -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98년 폐지되어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33개 종목만 취득한도가 제한됨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은 **약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17년 본격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좌** (omnibus account)도 **활용도가 떨어져**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없습니다.
- 외국인이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자료가 되는 **영문공시도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 코스피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영문공시는 국문공시의 13.8% 수준에 불과하고('22년), 사업보고서 등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법정공시는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영문 자동번역만 제공되는 수준입니다.
- 이러한 제도들은 **국제적 기준과도 차이가 큼**니다.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투자자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아시아 주요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공시언어를 영어로 채택 (홍콩, 싱가포르)하거나 부분적으로 의무화(대만)하였습니다.
 -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 '226월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2211월 ASIFMA Korea Capital Markets White Paper

➡ 1.19일(목)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참석자 주요 발언 ‘붙임1’ 참조

2 개선 방안

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은 LEI /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현황)**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되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마다 각각 “투자등록번호” (외국인ID)**가 부여되고, 투자등록번호별로 실시간 거래내역이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 * FIMS(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 (예) 만일 미국에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운영된다고 가정하면, 한국 투자자가 테슬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번역·공증받을 서류를 미국 SEC에 제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ID를 발급받은 다음 투자가 가능한 불편이 초래되며, 이후 실시간 거래내역도 SEC에 보고됨

➡ **(개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합니다.

* (내용)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구성) 법인명, 관할권, 주소, 설립일, 법인구분(펀드여부 등), 모회사정보 등

-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겠습니다.
- 모니터링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방식 대신, 필요시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나.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활성화

◆ 통합계좌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결제(T+2)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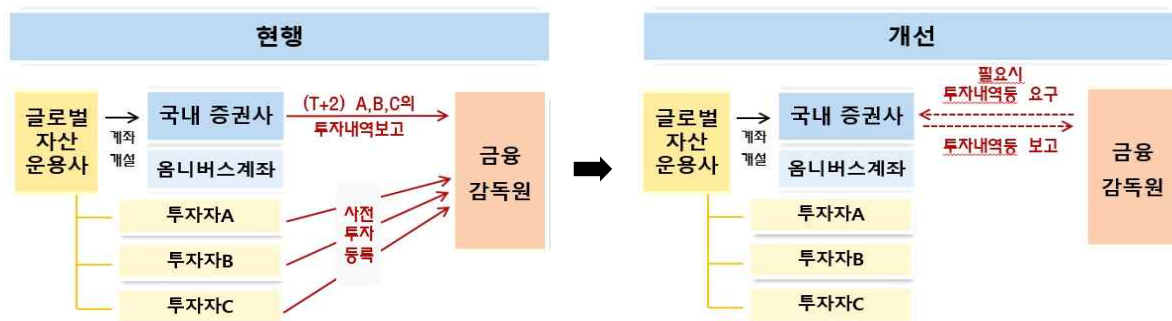
- **(현황)**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 통합계좌는 거래 편의성 때문에 도입된 것인데,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17년 도입 후 통합계좌를 활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 외국인 통합계좌 개요 >

- 다수 투자자 주식매매를 통합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증권사 명의 계좌개설
- 최종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매매주문하면,
 - 통합계좌 매매체결 내역에 따라 결제도 통합계좌에서 이뤄짐
 - 예: 글로벌 운용사가 통합계좌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들의 주문을 거래

➔ **(개선)**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 금융당국 등에서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하여 징구하고, 증권사 등이 이에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이후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사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여, 미흡사항 발생한 경우 즉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다.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전심사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성은 높이겠습니다.

□ (현황)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입니다. 장외 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범위는 제한적*이며, 사후신고를 할 때에도 신고수리(서류심사) 부담이 존재합니다.

*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CB·BW 권리행사 등

※ [장외거래 절차] (원칙) 사전심사 : 사전심사 → 승인 → 장외거래 → FIMS입력
(예외) 사후신고 : 장외거래 → 신고 → 신고수리 → FIMS입력

➡ (개선) 사후신고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유 형	사 례
실질소유자 미변경	▶ 펀드 합병, 모자펀드간 이전, 운용사-펀드간 이전, 동일 운용사내 이전 등
기업합병·구조개편	▶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펀드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 등
현물배당	▶ 외국법인이 보유한 보통주를 외국인 주주에게 현물배당 등

○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FIMS에 바로 입력(→ 신고절차 종료)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관행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온 조건부매매, 직접 투자 등(서류심사 대상의 약 80%)

라.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 기업의 영문공시를 단계적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해 다각도에서 지원방안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현황)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¹⁾,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²⁾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1) 공시제목, 레이블이 실시간으로 영문 자동변환되어 영문 KIND(거래소)에 게시

2) '22년중, 코스피 상장사 140社(17.6%)가 거래소에 총 2,453건의 영문공시(국문공시의 13.8%)를 제출 (※ '21년 : 113社(14.2%), 총 1,597건(9.2%))

➔ (개선) '24년부터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1단계 의무화 : '24~'25년) 자산 10조원 이상 등 상장사에 적용

- (대상법인) ①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②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단, 자산 2조원~10조원) 코스피 상장사
 - 단,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中 ①결산 관련 사항, ②법정공시 공통사항,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 (공시시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 (2단계 의무화 : '26년~) 의무화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

- (대상법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 단, 2단계부터 신규로 영문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의 경우, 1단계 항목부터 적용 (2단계 항목은 '28년부터 적용)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1단계 +α) + 일부 법정공시(영문요약본)
- (공시시한)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 ※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확정

- (영문공시 지원) 기업들이 영문공시 의무화에 원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 (영문번역 지원)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상장수수료 면제 등) 부여,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
-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영문 자동변환 확대, 국문 법정공시의 영문 검색기능 제공, AI기반 기계번역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 영문 KIND (거래소), 영문 DART (금감원)

3 기대 효과

-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 증대)**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외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장외거래의 편의성도 증대됩니다.
- 외국인 통합계좌가 활성화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여러 펀드의 주문과 결제를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어 계좌관리 부담과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 외국인 개인뿐만 아니라 해외 교민과 중소 기관투자자도 글로벌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를 통해 우리 증시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확대**되고 국내 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일한 수준의 감독 가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 거래소의 거래내역(주문별 종목·수량·국적·기관유형, 식별수단X)과 장외거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종목별·국적별·기관 유형별(펀드·연기금 등) 주요 통계(투자동향)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종목별로 외국인 보유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33개 취득한도 관리종목(붙임3 참조)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외국인 취득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 **(외국인 투자제도)** 금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24년~)를 위해 1분기중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2단계 의무화 방안을 확정·추진하겠습니다.

< 세부 추진일정 >

개선방안	조치사항	일정	소관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통합계좌 활성화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장외거래 편의성 증대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1단계 의무화를 위한 거래소 공시규정 등 개정	1분기	거래소
	영문번역 서비스 교육홍보 등 지원방안 시행	계속	거래소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계속	거래소, 금감원
	2단계 의무화 방안 확정 및 규정 개정 등 추진	'25년중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 [참고] 주요 Q&A

[붙임1] 1.19일 「금융규제 혁신회의」 참석자 주요발언

[붙임2] '22년 MSCI 접근성 평가결과

[붙임3] 취득한도 제한종목('22年末 기준)

[별첨]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이수영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심원태 (02-2100-2656)
<공동>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02-2100-2691)
<공동>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황선오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이장훈 (02-3145-7611)
<공동>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책임자	국 장	안승근 (02-3145-8100)
		담당자	팀 장	유희준 (02-3145-8610)
<공동>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책임자	부 장	송기명 (02-3774-8580)
		담당자	팀 장	정창규 (02-3774-8590)
<공동>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책임자	부 장	진동화 (02-3774-9060)
		담당자	팀 장	우민철 (02-3774-9100)
<공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책임자	부 장	이근영 (02-3774-8730)
		담당자	팀 장	김성곤 (02-3774-8740)
<공동>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부	책임자	부 장	조성일 (051-519-1535)
		담당자	팀 장	박중훈 (051-519-1540)
<공동>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1부	책임자	부 장	진양규 (02-2003-9100)
		담당자	과 장	우민경 (02-2003-9103)
<공동>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	책임자	부 장	홍문유 (02-767-8300)
		담당자	팀 장	김기종 (02-767-8341)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면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증권사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 ☐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증권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려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금감원) → 실명확인·고객확인(증권사)” 필요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시 “실명확인·고객확인(증권사)” 절차만으로 계좌개설 및 상장증권 거래가 가능
- ☐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절차가 없어져 편리해지고, 증권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실명확인·고객확인 의무를 부담
- ※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고객확인 의무는 「금융실명법」, 「특정금융정보법」과 그 규정에 따르며, 등록제도 폐지와 직접 관련이 없음*

* 외국인 투자등록증은 외국인 실명확인 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증명서 등) 중 하나

2. 30년만의 제도 변경에 따른 (중소형)증권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지?

- ☐ 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변경되는 실무적인 절차는 금투협 등 유관기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
- ☐ 가이드라인 안내 외에도 변경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증권사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3.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모니터링에 문제는 없는지?

- ☐ 제도개선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함
 -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거래내역을 활용하여 종목별·국적별·기관 유형별(펀드·연기금·국부펀드 등) 주요 통계는 현재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 외환 관련 모니터링 등 필요시, 주요 투자자의 투자동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음
- ☐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감시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외국인별 거래내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을 근거로 증권사로부터 직접 징구하여 활용이 가능함

4.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 ☐ 현재와 동일하게 외국인 투자자의 취득한도 관리가 가능함
 - 거래소에서 제공된 거래내역으로 33개 취득한도 관리종목에 대한 전체 외국인 보유현황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취득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1인당 취득한도를 관리하는 종목(한전·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 기준으로 개별 보유내역을 별도 관리하여 취득한도를 관리하고, 통합계좌의 거래는 제한*

* 최종투자자의 투자자별 보유내역 실시간 확인이 불가

5. 영문공시는 국문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지?

- ☐ 영문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오역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소송제기 리스크임
 - 영문공시는 투자참고용으로, 국·영문 불일치 시 국문이 우선되고 투자판단 前 투자자의 국문공시 확인이 필수*임
 - * 전자공시시스템상 모든 영문공시에 해당 주의문구 게시 중
 - 다만, 의도적인 오역, 허위공시 등 상장법인의 귀책이 명백한 경우까지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 ☐ 한편, 영문공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문공시*와 다른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등 통해 불성실공시 제재(거래소공시)
- 영문공시 의무불이행법인 공표 등 간접적인 방안을 검토 중

- ◆ 1.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본 방안에 대해 심의
-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전향적 방안이라고 평가

- ①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해외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30여 년 넘게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
- ② (블랙스톤 하영구 회장) 해묵은 체증이 내려갔다고 느껴질 만큼 오래된 숙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됨
 - 통합계좌의 경우 과거 도입은 되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답을 찾았다고 판단됨
- ③ (중앙대 신인석 교수)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개방의지가 없는, 외국인 차별이 체화된 나라라고 평가하는 ‘상징적인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④ (한양대 이항용 교수) 금융규제 혁신회의의 큰 성과라고 판단되며, 개선방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증권사에 제도개선으로 변경되는 세부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
- ⑤ (서울대 이정수 교수) 정부에서 배당절차 개선방안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당절차 개선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임
- ⑥ (한국외대 안수현 교수)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라고 생각되며, 제도개선 방안이 증권사에 잘 안내되어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면 좋겠음

- ◇ 6.9일, MSCI 글로벌 마켓 접근성 평가 결과 발표 ☞ 한국은 총 9개 항목 지적
- (기존 지적) 외환시장 자유화, 외국인투자자 등록 관련 이슈 등 (8개)
 - (신규 지적) SKT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소진 (1개)

- ① **(외국인 동일권리)** 영문공시 실시간 접근이 제한되며, 국제 기관 투자자는 한국기업 지배구조에 의문 제기
- ② **(외환시장 자유화)** 역외 외환시장이 없고, 역내시장 제약 지속
- ③ **(외국인 투자등록)** 외국인 투자등록이 의무이며, 문서제출 부담 상당
- ④ **(청산·결제)** 옴니버스 계좌* 결제가 투자자 ID별로 이루어지며, 증권 결제 목적 당좌대월(over draft) 이용 불가
- *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다수 투자자 매매를 통합하여 주문할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 ⑤ **(정보)** 배당기준일 후 배당금 공시되며, 예상 배당금 정보 미제공
- ⑥ **(증권 이동성)** 장외거래 제약이 있으며, 승인절차 등이 비실용적
- ⑦ **(공매도)**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금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계획 없음
- ⑧ **(투자상품 가용성)** 시장 데이터 이용 제한으로 상품 가용성 제한
- ⑨ **(외국인 투자여력^{신규지적})** SK텔레콤 외국인 보유 한도 소진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T 외국인 보유한도는 49%로 제한(8.26. 기준 47.3%)

※ [참고1] MSCI 발표 원문

Equal Rights to Foreign Investors: Information disclosure in English has improved but is not always readily available. Company related information is not always readily available in English. In addition, the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of Korean companies have often been questioned by international institutional investors.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Level: There is no offshore currency market and constraints persist on the onshore currency market.

Investor Registration & Account Set Up: Registration is mandatory and requires a significant amount of supporting paperwork (IRC system).

Information Flow: Information disclosure in English has improved but is not always readily available for all companies.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disclose dividend amounts after the ex-date of the dividends, which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Also, estimated dividends are generally not provided.

Clearing and Settlement: Omnibus accounts enable consolidated trading orders, but settlements are still on a per investor ID basis. Overdraft facilities remain unavailable for securities settlement purpose.

Transferability: The ability to carry out in-kind transfers and off-exchange transactions remains very limited and is impractical due to the rigidity and the approval process.

Short Selling: Is allowed but is restricted to certain securities. A short selling ban was put in place in March 2020 as a COVID-19 related measure. In May 2021, the ban was partially lifted for securities included in the KOSPI 200 and KOSDAQ 150 Indexes. There is no timeline on the potential resumption of short selling for the remaining securities in the Korean equity market.

Availability of Investment Instruments: Restrictions imposed on the use of stock market data have led to limited availability of investment instruments.

Deterioration

Foreign Room Level: “++” to “+”. Following a deterioration in the foreign room of SK Telecom; more than 0.3%, but less than 1% of the MSCI Korea IMI is currently affected by foreign room issues.

※ [참고2] MSCI 한국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

평가항목	'20.6월	'21.6월	'22.6월
1. 시장 개방성			
① 투자자 자격요건	++	++	++
② 외국인 지분 제한 수준	++	++	++
③ 외국인 투자 여력 수준	+	++	+
④ 외국인 투자자 동일 권리 보장	+	+	+
2. 자본 유출입 용이성			
① 자본 유출입 규제	++	++	++
②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	-	-
3. 시장 운영의 효율성			
① 시장 진입			
a)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	-	-
② 시장 구조			
a) 시장 규제	++	++	++
b) 정보 흐름	-	-	-
③ 시장 인프라			
a) 청산 및 결제	-	-	-
b) 수탁	++	++	++
c) 등록 및 예탁	++	++	++
d) 매매	++	++	++
e) 증권 이동성	-	-	-
f) 대주	++	++	++
g) 공매도	++	+	+
4. 투자상품의 가용성	-	-	-
5. 제도적 안정성	+	+	+

++ : 문제없음, + : 큰 문제 없음. 개선이 필요한 상황, - : 개선 필요

*

붙임3
취득한도 제한종목 ('22년 末 기준)

(단위 : %)

순번	근거법령	종 목*		외국인 한도(a)
1	자본시장법	한국전력	코스피	40
2	전기통신사업법	KT	코스피	49
3		LG유플러스	코스피	49
4		SK텔레콤	코스피	49
5		아이즈비전	코스닥	49
6		세종텔레콤	코스닥	49
7		와이어블	코스닥	49
8	공기업민영화법	한국가스공사	코스피	30
9	방송법	SBS	코스피	0
10		KNN	코스닥	0
11		티비씨	코스닥	0
12		YTN	코스닥	10
13		현대홈쇼핑	코스피	49
14		현대퓨처넷	코스피	49
15		스카이라이프	코스피	49
16		LG헬로비전	코스피	49
17		한국경제TV	코스닥	49
18		인포뱅크	코스닥	49
19		SBS콘텐츠허브	코스닥	49
20		디지털조선	코스닥	49
21		케이티알파	코스닥	49
22		씨씨에스	코스닥	49
23		CJ ENM	코스닥	49
24		KX	코스닥	49
25	신문법	콘텐츠리중앙	코스피	30
26		아시아경제	코스닥	30
27	항공법	대한항공	코스피	49.99
28		아시아나항공	코스피	49.99
29		대한항공우	코스피	49.99
30		진에어	코스피	49.99
31		에어부산	코스피	49.99
32		티웨이항공	코스피	49.99
33		제주항공	코스피	49.99

* 코스피 18개 종목, 코스닥 15개 종목 ** 1인당 한도 : (한국전력) 3%, (가스공사) 15%